

기초생활권 연계 · 협력사업 추진 방향

김 현 철(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 약>

- I.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변화
- II.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전남의 정책 방향
- III.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연계 · 협력사업 추진 방향
- IV.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

〈요 약〉

□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기초생활권 발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계정이 편성됨.

- 지역개발계정 사업분야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관련 사업,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 관련 사업,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업 등
- 지역개발계정은 현행 210개 기초생활권 관련 단위사업을 7개 정책 분야 24(19+5)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하여 포괄보조금으로 지원
- 이 중 19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하여 재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한 5개 사업은 시·군·구가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을 선택 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정부의 다차원적인 지역발전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전남의 정책목표별 추진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총 22개 시·군(5시, 17군)으로 구성된 전남도 기초지자체를 지역적 특성, 지역연계성 및 서비스 접근성 등 생활권을 고려하여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고, 시·군별 특성과 잠재력에 기반한 특성화·차별화된 사업개발 추진
-

- 교육·의료·문화·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 거점화, 지역특화자원 및 향토자원의 융복합화로 소득·고용 창출 등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 광역권과 기초생활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도농통합적 개발 추진

II.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전남의 정책 방향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기초생활권 발전 추진전략

- ①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추진
 - 163개 시·군을 인구, 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 생활권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추진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유 형	여 건	중점 개발방향
도시형	대도시와 연계·통합 개발이 가능하거나,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도심 재생
도농연계형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발전이 가능한 시·군 지역	중심도시와 농촌지역간 도농통합적 개발
농산어촌형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	인접 군 지역간 통합·연계 개발

